

멀티미디어 시대, 뉴스통신사의 뉴스채널 방안1)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1. 미디어 환경변화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위상

이명박 정부의 탈규제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채널에 대한 소유제한을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이나 뉴스채널을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에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술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는 전반적인 채널 개방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정책의 정당성도 있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시장경쟁에서 디지털 압축 기술과 IPTV 등의 도입으로 인한 여유 방송채널의 증가로 방송의 전과 희소성 원리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둘째, 국내외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시장 설계 보다는 시장 경쟁의 원리가 필요하게 됐고, 셋째, 방송통신 시장 경쟁의 무대가 글로벌 환경으로 확대되면서 경쟁국 또는 다국적 자본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탈규제, 사유화, 융합으로 표현되는 기술과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전통적으로 미디어 정책의 기본 가치로 작동해 왔던 공공성, 공익성, 민주주의 가치 등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미디어 조직의 독과점에 따른 여론의 독과점, 공정거래 질서의 훼손 등에 우려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한된 자원과 비좁은 시장규모에서 자칫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공멸 구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찌됐든, 관련 미디어법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사이, 시장지배적 신문사들과 한 개의 경제신문이 종합편성 채널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연합뉴스를 비롯한 소수의 언론사들이 뉴스채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연합뉴스의 국가기간 뉴스통신의 위상이 보다 안정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관련 법이 아니더라도 연합뉴스는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상당기간 대한민국

1) 이 글은 필자의 선행 관련 논문인 최영재 (2008).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뉴스전문 채널의 위상 변화“를 부분적으로 재인용 또는 수정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국을 대표하는 “유일 통신사” 로 국내 언론에 포괄적인 시사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뉴스시장에서 뉴스 교류와 경쟁, 협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더욱이 연합뉴스는 1995년 3월에 개시된 케이블방송에서 국내 최초의 종합뉴스채널인 YTN을 출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재편되는 방송통신시장, 특히 방송뉴스 시장에 상당정도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글은 다수의 종편과 뉴스 채널의 등장이 예고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뉴스채널을 창출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의 미디어 정책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미디어 정책적 가치 아래서 그러면 어떤 뉴스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탈규제 경쟁 체제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전제로, 뉴스전문 채널 정책의 바람직한 구현 방안과 향후 대두될 뉴스전문 채널의 위상 변화와 정책적 해결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첫째,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채널 정책의 중요성과 고려해야할 정책적 가치를 논의했다.

둘째, 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뉴스시장의 산업적 경쟁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주권의 구현 차원에서 선진국들의 뉴스채널 정책 모델을 분석했다.

셋째, 선진국 사례와 대비되는 한국형 뉴스채널 정책 모델을 논의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뉴스채널 위상 변화를 검토했다.

다섯째, 향후 뉴스채널 정책에 관한 몇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마도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과 시장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뉴스 프로그램 및 뉴스 채널 정책일 것이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진보는 방송 플랫폼과 채널, 서비스의 다원화와 복잡화를 초래하고 있고, 방송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 상업화 경향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적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되면서 다국적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면서 선진국의 방송통신 시장 개방 압력 또는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글로벌 방송시장은 시장의 영향력과 국제 규제 제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세계 각국의 미디어 정책 또한 융합과 탈규제, 사유화로 표준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Katz, 2005; WRR, 2005).

2. 뉴스채널 정책의 지평

1) 뉴스채널 정책의 논의수준

뉴스 채널은 공급과 수요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고, 국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국가 주권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역할 부담까지 안고 있어 고도의 정책적 전략을 요구한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뉴스채널 정책 논의는 온통 신문방송 경영 허용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문방송 경영 허용 정책은 방송산업이나 뉴스채널 정책 보다는 신문산업 정책에 가깝다. 신문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로비해 왔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정치적 교감 차원에서 정책이 진척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채널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국한해서 본다하더라도 정책 논의 범위는 특정 신문사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TV뉴스 산업 및 저널리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정책은 목표로 대체로 규제든 탈규제든 산업 및 경쟁 정책, 소비자 정책, 민주주의와 문화 정책 등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Syvertsen, 2004; Salomon, 2006; Napoli, 2006). 이같은 세가지 차원은 뉴스채널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Ofcom, 2006b 참조)

먼저, 뉴스채널의 산업적 경쟁력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들을 구성해 볼 수 있다.

- 뉴스 서비스 생산의 시장 여력은 있는가?
- 뉴스 서비스의 다양화, 다원화는 가능한가?
- 뉴스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가?
- 뉴스서비스의 영역은 확장 가능한가? : 틈새시장, 지역뉴스 시장, 국제뉴스 시장 등
- 뉴스 서비스 생산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같은 뉴스채널의 산업적 규모와 다양성 확장 목표는 대체로 탈규제 시장경쟁 정책으로 달성 가능하다. 다만, 글로벌 뉴스 시장은 국가 주권 및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있고 수익 구조가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지원 정책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뉴스의 소비자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질 수 있다.

- 뉴스 시청자 규모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 시청자들이 뉴스를 수신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소수여론, 지역 여론의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뉴스의 콘텐츠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 뉴스채널의 콘텐츠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는가? 여론독과점은 없는가?
- 뉴스 보도는 공정한가? 불편부당한가?
- 뉴스 보도의 품질은 향상되는가?
- 뉴스 보도가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표1> TV뉴스채널 정책의 목표

차원	공급 차원	수요 차원	콘텐츠 차원
정책 범주	산업 및 경쟁 정책	소비자 정책	민주주의, 문화 정책
정책 목표	- 매체의 동등한 접근 - 국가 매체 산업과 생산의 경쟁력	-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 - 소비자 보호와 상업주의 경계	- 다양성과 다원성, -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 공적 토론 - 문화, 정체성, 언어
뉴스채널 정책 목표	- 뉴스 생산 능력 제고 - 국제 경쟁력	뉴스 소비 증대 소수 여론 보호 지역 뉴스 정책	여론의 다양성 보도의 공정성
정책 수단	탈규제 국가적 지원	공적 지원	소유 규제 콘텐츠 규제

* 출처: Syvertsen (2004)와 Salomon (2006), 그리고 영국 Ofcom (2006b), 미국 FCC (2006)의 방송통신 정책 목표를 참고로 재작성한 것임.

이와 같은 규범적 차원의 뉴스채널 정책 목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뉴스채널 승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겠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분히 정치적 함의의 과다로 인해 정책적 가치의 왜곡 현상은 채널 선정 과정과 선정 이후의 시장질서의 혼란 뿐만 아니라 소모적 경쟁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2) 뉴스채널의 국제 경쟁적 성격

뉴스 채널은 국내 시사정보 뿐만 아니라 국제뉴스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뉴스 채널의 국제 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뉴스채널의 논의를 국내에 국한하거나, 특히 국내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의 강박에 빠져들게 되면, 자치 국의 저해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속화되는 지구촌화 현상에 부응하여 가령, 국내 뉴스채널인 YTN은 위성을 타고 거의 전세계에 방영되고 있고, 영어방송인 아리랑 채널도 마찬가지로 국제 채널이 되면서 한국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역으로 다수의 외국의 뉴스채널들도 국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 국내에서 시청 가능하다.

뉴스 채널은 따라서 자국내 민주주의 실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국가 주권을 실현과 정체성 경쟁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지구촌 상공에서는 수십개의 글로벌 뉴스 채널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전파는 뉴스 및 의견 보도를 수행하고 있다.

CNN 등 미국 채널들은 사영으로 운영되는 반면, 영국 BBC World는 공적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프랑스의 France 24와 러시아의 Russia Today TV, 스페인의 La Nueva Televisora del Sur, 이란의 Press TV 등은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런 뉴스채널의 소유 형태, 뉴스의 품질, 운영 방식 등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긍정,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뉴스채널 논의는 다른 경쟁 또는 협력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뉴스채널의 역량과 범위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뉴스채널 분야에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기 쉽다.

<표2> 국제 뉴스 채널

Africa: CNBC Africa • SABC News International • Nile TV International

Asia: ABS-CBN News Channel • Al Jazeera English • CNBC Asia • Channel NewsAsia • CCTV-9 • Press TV • CTV News Channel • TVBS-NEWS • CTi News • Phoenix InfoNews Channel • STAR News • SET News • Era News • Unique Business News • ETTV News • ETtoday • FTV News • NDTV 24x7 • YTN

Europe: BBC World News • Class CNBC • CNBC Europe • Deutsche Welle • EuroNews • France 24 • Rai News 24 • Russia Today • SIC Notícias • Sky News • SKY TG24 • TVE 24H • TVN 24

North America: Bloomberg Television • CNBC • CNN International • VOA TV

Oceania: Sky News Australia • Sky News New Zealand • TVNZ 7

South America: teleSUR • Record News

3. 아시아 주요 뉴스통신사의 뉴스채널 운영

1) 아시아 뉴스통신사의 영상뉴스 서비스 동향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뉴스통신사들의 영상뉴스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부쩍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스스로 AP, 로이터, AFP와 함께 세계 4대 통신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신화통신사는 내년에 “중국의 목소리와 사상을 전세계에 전하는” 뉴스채널을 발족시켜 장기적으로 CNN과 BBC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통신(VNA)도 내년에 뉴스채널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교도통신이나 인도의 PTI 들도 채널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영상뉴스 서비스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90년대 YTN을 발족시켰으나 매각을 한 뒤, 2009년 현재 뉴스채널 재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YTN은 현재 하루 6시간의 실시간 인터넷 뉴스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연합뉴스가 국제뉴스 시장에서 종래의 텍스트 위주의 경쟁에만 안주할 수 없게 한다. 아시아 지역의 뉴스통신사들이 영상 뉴스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뉴스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뉴스통신사와 영상뉴스의 교류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상뉴스 진출 및 뉴스채널 운영에 나선 주요 뉴스통신사를 포함한 신규 방송주체들간의 아시아 영상뉴스 시장의 선점을 놓고 경쟁의 불꽃이 점화되고 있는 순간이다. 현재 아시아지역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 영어 뉴스채널인 'Channel NewsAsia'가 유일한 아시아국가 소유의 아시아 뉴스채널이다.

다음은 중국 신화사와 베트남 통신의 뉴스채널 진출 계획에 관한 소개이다.

(1) 중국 신화사의 TV뉴스채널 추진

중국정부는 2009년 초 신화통신사가 전세계 뉴스시청자를 위해 영어뉴스 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채널의 목적은 “중국의 목소리와 사상을 내보내 전세계의 뉴스시청자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것” 으로 신화사 관계자들이 말했다. 목표는 CNN이나 BBC에 필적하는 것인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는 이미 중국어를 비롯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방송을 하고 있으며 세계 137개 국가에서 8,38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450억 위안(약 9조원)을 투자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나설 계획인데, 주로 'CCTV', '신화통신사' 그리고 '인민일보' 등 국영미디어에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모닝 포스트, 2009년 1월13일자). 이 계획에는 CCTV의 채널 확장 계획을 포함해 신화통신사의 24시간 뉴스채널 설립 및 인민일보의 영자지 창간 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신화통신사의 뉴스채널은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 같이 세계적 영향력을 구축해, 중국 국내용 방송이 아닌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송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언론들이 전했다.

신화사는 뉴스채널 발족 계획 외에도 이미 2009년 8월부터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3개 이동 통신사 가입자들의 핸드폰을 통해 TV 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3사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신화통신의 31개 국내 지사와 110개 해외지국의 방송기자들이 취재한 TV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문자, 사진, 그래픽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볼 수 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신화 뉴스서비스를 등록하면 TV뉴스를 시청할 수 있으며 처음 2개월 동안은 무료이다.

이를 위해 신화 통신은 2009년 7월부터 유럽의 중국 대사관에 설치된 TV 스크린을 통해 영어 뉴스 프로그램 방영을 시작해 비자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시청으로 반응을 살폈다. 또한 사회네트워킹 사이트인 Kaixin001을 통해서도 중국어 TV뉴스를 방영했다. 신화 통신사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구 시청자에게 중국의 사상과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신화통신은 매일 600분 분량의 TV뉴스를 중국어와 영어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차이나 모바일 가입자는 4억 9천 300만 명이며 차이나 유니콤은 1억4천100만 명, 차이나 텔레콤은 3천 544만 명이다.

(2) 베트남 뉴스통신의 TV뉴스채널 추진

베트남 통신은 내년 초부터 뉴스 전문 TV 채널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2010년 초부터 뉴스 전문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채널은 베트남 최초의 뉴스 전문 채널로서 첫해에는 베트남어 뉴스를 매일 12시간씩 방송한다. 그 후 영어와 다른 언어 뉴스를 방영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공위성과 TV채널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트남과 세계 각국의 기자와 특파원 1천여 명이 활용될 것이다.

[VNA의 뉴스채널 발족 관련 기사]

베트남 통신은 내년 초부터 뉴스 전문 TV 채널 운영을 시작한다. 누옌 호아이 두영 베트남 통신 오디오-비디오 센터장은 누옌 탄 등 총리가 자사의 TV 채널 생산 프로젝트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영 센터장은 자사가 설립할 TV 채널에 대해 "현재 베트남 대부분의 TV 채널이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뉴스 전문 채널이 될 것"이라고 베트남 통신의 TV채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첫 해에는 베트남어 뉴스를 매일 12시간 씩 방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 후에 영어와 다른 언어로 뉴스를 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위성과 TV채널을 연결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베트남과 세계 각국의 기자와 특파원 1천여명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vietnamnews.vnagency.com.vn/showarticle.php?num=03CUL120909>

2) 아시아 주요 뉴스통신사의 국제경쟁력 비교

만약 연합뉴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영상뉴스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고 할 때, 다른 주요 뉴스통신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경쟁 역량을 어느정도나 될까. <표3>은 영상뉴스 생산 부문에서나 영어뉴스 생산과 같은 국제화 부문에서 연합뉴스는 다른 경쟁적인 아시아 뉴스통신사에 비해 대체로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수나 특파원수에서 연합은 신화사나 교도통신은 물론, 베트남 통신 보다도 밀리고 있다. 신화사가 뉴스채널이나 영어뉴스 서비스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연합뉴스에 비해 베트남뉴스는 뉴스채널 진출에 있어서, 교도통신은 영어뉴스 생산 능력에 있어서 앞서고 있다. 연합의 강점은 YTN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인터넷 방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3> 아시아 주요 뉴스통신사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합	신화사	교도통신	베트남통신	PTI
인력규모	733명	13,000명	1,700명	2,000명	1,400명
기자수	528명	5,000명	1,047명	900명	350명
해외지사	34곳	100곳 (186 계획)	46곳	27곳	12곳
특파원수	47명	320명	70명 (통신원 10 현지고용 40 리포터 40명 별도)	63명	20-25명 (통신원 35명 별도)
영어뉴스	본사 18명 영어특파원 워싱턴 1명	?	본사 인력외 영어특파원, 19개 지역 영어인력 현지채용	30명	영어권
영상 뉴스	하루 6시간 온라인 방송 69명 (VJ 39포함)	*인터넷, 모바일 방송 *영어뉴스채 널 내년발족	온라인 뉴스 공급	*케이블/인 터넷 통해 일부시간 방영 *뉴스채널 내년 발족	뉴스 비디오 공급

4. 국내 뉴스채널의 현황과 전망

다시 국내 뉴스채널의 현실에 눈을 돌려 보면, 새로운 뉴스채널은 방송통신 승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경영이나 편성, 제작 측면에서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직면할 것임은 틀림없다.

1) 현황

1992년말 케이블TV 도입과 함께 시작된 뉴스채널 정책은 처음부터 정부가 시장을 설계하고 사업자를 구성하는 형태를 띠었다. 케이블TV 채널 분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자를 복수로 허가했으며, 그 가운데 뉴스채널은 대기업,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배제하고 최대지분 30% 제한하는 소유규제 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했다. 김영삼 정부의 공보처는 1993년 8월31일 1개 분야의 20개 업체를 케이블 채널 공급자(Program provider, PP)로 선정해 발표했다. YTN은 케이블TV 종합 뉴스 전문 채널로 승인을 받았고, MBN은 경제뉴스 전문 채널로 허가를 받았다.

YTN의 초기 자본금은 1993년 9월 14일 법인이 설립될 때 150억원이었다. 연합통신이 30%인 45억 원으로 최대주주였고, 나머지는 11개 민간 회사들이었다. 그뒤 1994년 4월 28일 자본금 150억원이 늘어나 총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증가했고, 1995년 3월1일 YTN이 첫 전파를 발사할 때는 자본금 300억 원 규모였다.

1997년 12월2일 최대 주주가 연합통신에서 한전 KDN(정보 네트워크)으로 바뀌었다. 1998년 12월31일에는 1100억원의 자본금이 또다시 늘어나면서 총 자본금은 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자액 1100억원은 담배인삼공사 440억원, 한전 KDN이 330억원, 한국 마사회 200억 원, 한빛은행(옛 상업은행) 130억 원등으로 구성됐다. (김관상, 2004).

YTN의 초대 대주주인 연합통신은 형식상으로는 민간 주주회사이지만 KBS와 MBC가 사실상 대주주인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YTN의 대주주들도 정부투자 기관들로 구성돼 사실상 공적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실제로 1998년 YTN이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사례들은 YTN이 유사 공영 구조임을 시사한다.

<표4> YTN 주주구성

주주명	주식수(천주)	지분율(%)
한전케이디엔	90억원	21.43%
케이티앤지	83.8억원	19.95%
미래에셋생명	57억원	13.57%
한국마사회	40억원	9.52%
(주)우리은행	31.9억원	7.60%
기타 일반 주주	149.2억원	35.53%
소계	420억원	100.00%

뉴스채널의 경영 성과를 보면, 개국 이후 12년이 지난 2007년 현재 YTN와 MBN의 매출액은 각각 830억과 380억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들어 흑자로 돌아섰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YTN의 경우 1995년 개국후 방송부분에서 계속되는 적자발생으로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00년 자본금이 2,1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매출원가를 초과하지 못하는 영업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YTN은 그나마 2000년 서울타워 인수를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하였으나 방송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개국후 11년이 지난 2006년부터 발생했다. 2000년 서울타워 인수에 따른 영업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매출원가가 크게 발생하여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지분투자한 코크랩(부동산 리치 회사)에서 영업외수입(배당금) 등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개선됐다. 방송부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6년 부터 겨우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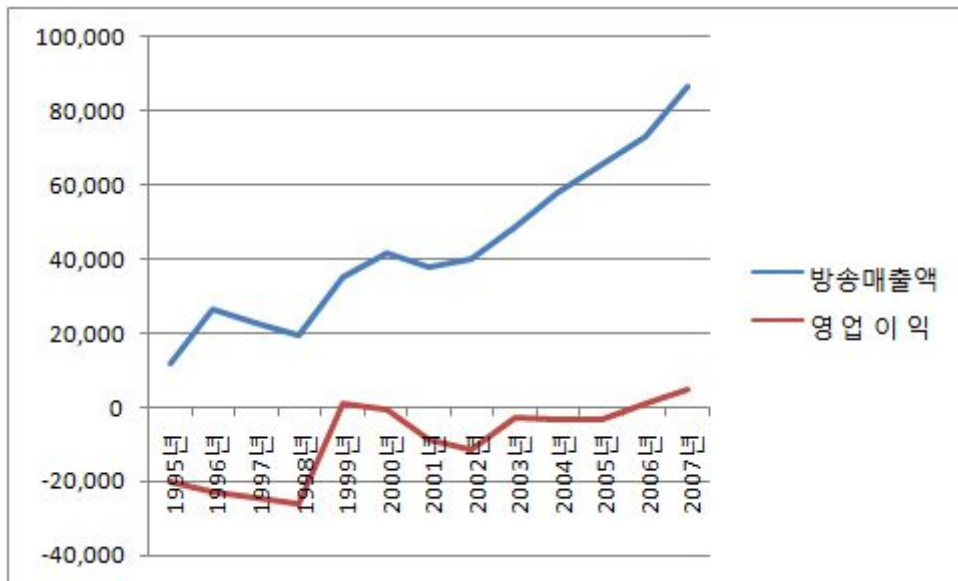
<표5> 보도채널의 시장 성과 (2007년 현황)

구분	YTN	MBN
송출SO	107	107
매출액	83,185,027	38,505,344
자본금	42,000,000	27,514,500
최대주주	한전KDN	(주)매일경제신문
당기순이익	7,402,139	5,230,802
방송수신료	3,976,363	3,204,221
광고수익	50,937,564	31,732,211

* 2007년도 방송위원회 발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재구성

* 매출액은 2006년말 기준

<그림1> YTN의 방송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1995-2007) (단위: 1백만)



2) 전망

이명박 정부의 뉴스채널 정책의 방향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정책 등이 시사하듯 시장중심의 탈규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뉴스채널의 정책 모델은 전반적으로 사영 영역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때 정책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 1) 여분의 뉴스채널 수요 시장이 얼마나 있는가?
 - 2) 유사 공영 구조인 YTN의 소유구조는 변화할 것인가?
: 완전한 공영 구조 또는 사영 구조.
 - 3) 새로운 뉴스채널의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 4) 뉴스채널의 편성 및 콘텐츠 제작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5) 아시아, 글로벌 뉴스 채널은 구성은 가능한가?
- 등이다.

무엇보다 복수 경쟁 상황으로 가는 뉴스채널의 경영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편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방송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언론사들의 의욕은 충분히 읽혀지고 있다. 신문사간 경쟁상황에서 기회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송뉴스 사업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방송뉴스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방송뉴스 사업에 국내외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가 더욱 많다. 연합뉴스의 YTN의 소유 사례도 결국은 적자 경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분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CNN도 10년 가까이 적자를 감수해야 했고 지

금은 Fox News 채널의 등장으로 시청률 하락에 고민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뉴스시청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새로운 뉴스채널이 신규 뉴스시청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뉴스 편성 측면에서 보면 신문사든 대기업이든, 제3의 사업체든 추가적인 뉴스 채널 시장에 참여한다면 CNN이나 YTN과 같은 객관 뉴스 모델이 아니라 Fox news와 같은 틈새 시장을 찾는 편향적 의견 저널리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2의 YTN 형태의 뉴스편성은 시장의 매력을 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뉴스채널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자칫 뉴스채널 시장 규모를 키우려다 편향적 뉴스채널에 의한 국론 분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상황에서도 Fox news의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과 갈등, 그리고 담론과잉의 한국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편향된 뉴스 채널을 얼마나 관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는 보수신문의 뉴스채널 진출이라는 신방겸영 문제와 연결돼 여론 독과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하고 고급 또는 대중 문화적 취향이 가미된 의견저널리즘 채널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존의 YTN의 종편이나 제2 뉴스 채널 진출, 그리고 YTN 자체의 소유구조 변화 등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과정에서 전개될 뉴스채널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 틀림없다.

5. 연합뉴스의 뉴스채널 방안

1) 뉴스채널 검토

한국의 뉴스채널 정책 모델은 1990년 중반까지 가부장적 규제 모델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부하에 공익규제모델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시장 경쟁 모델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의 뉴스채널 진출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새로운 시장 경쟁자로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받은 연합뉴스는 공영적 성격의 뉴스통신사로서 새로 만드는 뉴스채널도 공영과 공익 추구의 규범적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뉴스채널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신화사나 베트남통신과 같은 아시아 지역 뉴스통신사들이 속속 뉴스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의 뉴스채널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뉴스통신이 뉴스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 등의 고객들에게 영상뉴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준에 국한하는 논의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협소한 국내 영상뉴스 시장과 채널을 가진 방송사들이 풀(pool)체로 영상뉴스 소스를 취재하는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국들이 비디오 뉴스 클럽이 아니라 ‘채널’로 들어대는 국제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그다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뉴스제작 현실로 보면, 여전히 24시간 뉴스채널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서 연합뉴스의 조직과 경쟁할 만한 국내 사업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연합뉴스로서는 YTN을 창출해냈던 1992년 체제가 다시 찾아 오고 있는 셈이다.

2) 소유 구조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연합뉴스는 뉴스채널의 지분을 30%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연합뉴스가 YTN의 30% 대주주로 출발했던 때와 유사한 환경이다.

뉴스채널의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는 YTN의 구조 변화 가능성이다. 연합뉴스의 YTN 재인수 가능성도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기존의 케이블TV의 MPP 사업자들이나 IPTV에 투자를 한 통신사업자들과 제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대안들은 두가지가 한가지로 합치는 통합된 형태의 소유구조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편성, 제작

새로운 뉴스채널의 편성 제작과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기존의 YTN이 소유구조 등의 변화가 없는 경우, 새로운 채널은 제2의 YTN의 모습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큰 흐름은 차별화된 편성인데, Fox 뉴스의 의견저널리즘 양식, CNN Headline식의 브리핑식 뉴스 양식, 또는 버라이어티를 가미한 종합구성식 뉴스 양식 등을 검토할 만하다.

제작은 필히 저예산 제작 방식으로 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작 기술과 시스템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다.

4) 국제뉴스 채널의 가능성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적 특성과 국제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뉴스채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구촌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연결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도 한민족 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연합뉴스로서는 검토할 만한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뉴스를 연결하는 지역뉴스채널도 전

멀티미디어 시대, 뉴스통신사의 뉴스채널 방안

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니치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널들은 국내 뉴스채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수(2006). 디지털 전환이후의 공공서비스방송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KBI포커스』, 06-1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김영주(2008). 신문의 방송진출: 가능성과 사업성. 『미디어 인사이트』, 2008.04
통권2호. 한국언론재단.
- 박주연(2008).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 정책: 해외 사례와 그 시사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와 국내 현황을 중심으로. 『미디어 인사이트』,
2008.04 통권2호. 한국언론재단.
- 여은호(1996). 미국, 뉴스채널의 과열경쟁 현상. 『동향과 분석』, 1996-10-31,
통권32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최영재 (2008).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뉴스전문 채널의 위상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다매체 시대 뉴스전문 채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세미나, 2008년 5월9일. 예금보험공사 3층 대연수실.
- Amy Tübke-Davidson (2003-05-26). "Broadcast News". The New Yorker. Retrieved
on May 10, 2007.
- Daniel Shiman (2007).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on Television
Stations' ' News and Public Affairs Programming. FCC Media Study 4:
News Operations.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A-07-3470A5.pdf.
- FCC (2006). 2006 Review of the Media Ownership Rules.
<http://www.fcc.gov/ownership/>
- Katz, Yaron (2005). Media Policy for the 21st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Cresskill, N.J.: Hampton Press. Inc.
- Napoli, P. (2006). Media Diversity & Localism: Meaning and Metrics. Lawrence
Erbaum Associates.
- Ofcom(2004). Ofcom Review of Public Service Television Broadcasting: Phase 2
- Meeting the Digital Challenge.
- Ofcom(2006a). Ofcom Review of Public Service Television Broadcasting: Phase
3- Competition for Quality.
- Ofcom(2006b). Digital 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ost Digital
Switchover.
-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08). The State of the News Media
2008: An Annual Report on American Journalism. (2008-04-27).
- Salomon, Eve. (2006). Guidelines for Broadcasting Regulation. UNESCO.
- Syverten, Trine (2004). Mediemangfold (Media diversity), Ij Forlaget, Oslo.
- WRR, the Netherlands 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2005). Media

멀티미디어 시대, 뉴스통신사의 뉴스채널 방안

Policy for the Digital Age. Hagu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Yoon, Y., & Yi, G. (2002). media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coverage of Dokdo Island. Korea Journal, 42(4). 264-297.